

##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강정숙\*\*

### 초 록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 군 '위안부' 동원업자와 군위안소 업자(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군 '위안부' 동원 및 군위안소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이들은 업자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덮어 씌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의 업자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자료는 일본군 관련 공문서 자료와 군 '위안부'와 관련된 이들의 구술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이 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역할을 규정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 일본군 규정과 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2) 군인 군속, 군 '위안부' 여성들의 업자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군위안소를 군의 부속시설로서 보았고, 군위안소 업자는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속, 군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위안소 유형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군 위안소 업자는 군인 군속일 경우는 물론 민간인 경우에도 준군속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제 운영에서의 책임을 민간인 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주제어 : 군위안소, 업자, 경영자, 일본군 '위안부', 군속, 군부속시설, 야전주보규정

\* 이 글은 이인선·황정임·양애경·김동식·강정숙·조윤주(201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수록된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논문심사위원회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wumright@hanmail.net)

## I.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서 제기된 이후 일본 정부관계자가 보인 입장은 ‘중군위안부’는 민간업자가 군을 따라 그들을 데리고 다녔으므로 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군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자료를 발굴공개함으로써 일본정부는 관여를 인정하였으나 일본 우익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의 책임이 민간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업자 책임에 많은 비중을 둔 박유하의 책이 간행되어 많은 논쟁이 있었다. 박유하는 “일본군이 장기간에 걸쳐 병사들을 ‘위안’한다는 명목으로 ‘위안부’를 발상하고 필요”로 했는데 이로 인해 “거대한 수요”가 만들어지고 불법이 횡행하였는데도 “모집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묵인”한 것에 일본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일본정부나 일본군의 책임을 “묵인” 내지 전쟁의 문제로 축소하고 “수요에 응해서 여자들을 유괴나 감언 등의 수단까지 써서 ‘데려간’ 것은 중간업자”였고 “위안부들을 데려간 행위의 ‘법적’ 책임은 직업적으로는 업자들에게 물어져야 한다”고 하여(박유하, 2013: 25-27) 국가 책임을 부인하였다. 박유하의 글 이전에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일본군에 의해 동원에서부터 군위안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책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왔다. 위 박유하의 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반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정영환, 2016).

군위안소 업자에 대한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이는 후지나가 다케시이다. 그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업자와 당시 상해 상황을 심층분석하여 군 ‘위안부’제 공창제 등이 얽혀 있는 상황과 다양한 방식의 군위안소 경영자로서의 진입현상을 분석하였다(藤永莊, 1995; 후지나가 다케시, 2006). 강정숙(2001: 2004)은 오키나와의 상황을 중심으로 오키나와로 동원된 군 ‘위안부’·업자·군관계에 주목하였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2009)와 강정숙의 논문(2011: 2012)은 인도네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안병직(2013)은 발굴된 군위안소 업자일기를 통해 군위안소 관련 군과 업자 및 군 ‘위안부’ 상태를 분석하였다.

윤명숙(2015)은 피해자 증언과 문서 등을 활용하여 여성징모에 있어 소개업자나 징모업자, 군위안소업자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선 내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좀더 일본 군대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흐름으로 본 것은 나가이 가즈(永井和,

2000 : 2012)와 하중문(2009)이다. 나가이 가즈는 군 ‘위안부’제 수립 초기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군 ‘위안부’를 동원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군위안소란 군이 설치한 병참부속시설로 규정하였다. 그 배경에 일본군의 개정 야전주보규정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군위안소 업자의 지위도 밝혔다(永井和, 2000 : 2012). 하중문(2009)은 일본군 구조와 함께 조선인 업자의 동선과 군에서의 대응 등을 통해 군업자와 일본군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접근을 했지만 군과 군 ‘위안부’ 동원업자 및 군위안소 업자(관리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정과 군 ‘위안부’의 생활을 규정짓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공개된 일본군 관련 군문서자료 중 각 층위의 군위안소에 관련된 규정과 이러한 공문서에서 사용된 군위안소, 군 ‘위안부’, 업자 등에 대한 호칭 등을 검토하여 일본군이 이들에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군 ‘위안부’ 동원업자 및 군위안소 업자(관리자 혹은 경영자) 특히 전장이었던 지역의 군위안소를 중심으로 군과 군위안소 업자, 그리고 군 ‘위안부’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서 각각 양자관계와 인식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업자와 군인·군속, 군 ‘위안부’와 업자의 관계는 구술이나 회고담이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나 군이 군위안소 업자와 군 ‘위안부’를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방침이나 일관된 입장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추정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 글을 쓰는데 사용한 자료로는 공문서를 수록한 자료집(吉見義明, 1992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 1997b : 1997c : 1998), 한국인 군 ‘위안부’ 구술집,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에서 수집한 일본인 군인 회고담(최덕수·변은진·안자코 유카, 2002a), 군속이나 노동자 등으로 전지에 있었던 한국인 구술, 각종 자료에서 업자의 실명을 찾아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a : 2009b : 2009c)과 미얀마와 싱가포르에 있었던 군위안소 업자가 남긴 「군위안소 업자 일기」(안병직, 2013),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귀환 시기에 만들어진 〈팔렘방[巨港]조선인회 명부〉(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등을 활용하였다.

## II. 군위안소 및 업자에 대한 일본군의 관련 규정

군위안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가이 가즈(2000:2012)는 군위안소를 “장병의 성욕을 처리시키기 위해 군이 설치한 병참 부속시설”이었다고 단언한다. 이는 이후 그가 발굴한 자료들을 통해 좀더 상세히 확인되었다. 우선 1937년 9월 29일 육달 제48호(陸達 第48號) ‘야전주보규정 개정(野戰酒保規程改正)’(國立公文書館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sup>1)</sup>이라고 하는 육군대신이 제정한 군의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위자료에 첨부된 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제정된 ‘야전주보규정’이 중일전쟁에 와서는 구식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했다는 것인데 그 개정안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야전주보는 전지(戰地) 또는 사변지(事變地)에서 군인 군속 기타 특히 중군을 인정받은 자에게 필요한 일용품, 음식물 등을 정확하게 또한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전주보에 있어 전항(前項) 이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 야전주보규정 제1조는 “제1조 야전주보는 전지(戰地)에서 군인 군속에게 필요한 수용(需用)을 정확하게 또한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위 인용된 바와 같이 개정 이후변화의 중요한 내용은 주보에 ‘위안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야전주보규정 개정 설명서’(경리국 의량과(衣糧課), 1937년 9월 15일 작성)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시설’이 곧 군위안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원자료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가장 광범하게 설치된 위안시설은 바로 군위안소였다.

군위안소가 일본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아래 자료로도 확인된다. 나가이 가즈(2012)는 2000년 논문 발표 이후 발굴한 자료를 인터넷에 소개하였는데, 시미즈 이치로(清水一郎)편 「초급 작전 급양 백제(初級作戰給養百題)(육군 주계단 기사발행부)(동 부서의 「육군 주계단 기사(陸軍主計団記事)」 제 378호 부록으로 간행)가 그 중 하나이다. 이것은 교관이 경리학교의 장교교육을 위해 1941년 간행한 책인데 이 책의 제1장 총설에는 사단규모의 부대가 작전할 때, 경리장교가 담당해야 하는 작전 급양업무(‘작전경리근무’) 중 ‘기

1)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國立公文書館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홈페이지의 “야전군매점규정개정에관한건(野戰酒保規程改正に関する件)” 참조.

타’에는 “1. 후보개설, 2. 위안소 설치, 위문단 초치, 연예회개최, 3. 흠병품(恤兵品) 보급 및 분배, 4. 상인(商人) 감시”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써 경리장교에게 위안소 설치의 의무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자료는 사단규모의 경리장교에 한하는 것이지만 장교에게 군위안소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1938년 5월 25일에 교육총감부는 전체 초급장교를 위해 「전시복무제요(戰時服務提要)」를 간행하였다. 여기에 벌써 “성병(性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방법을 강구함은 물론 위안소의 위생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군이 지정하는 외에 매소부, 원주민 등과의 접촉은 엄하게 근절하는 것을 요한다.”(吉見義明, 1992 : 163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 : 19)라고 하여 중일전쟁 직후부터 일본군은 전군에 군 ‘위안부’ 배치와 군위안소 설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군위안소는 어느 단위에 설치하였나. 이는 야전주보규정 제3조에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제3조 야전주보는 소요에 대응해 고등사령부(高等司令部)<sup>2)</sup>, 연대, 대대, 병원(病院) 및 현재 정원 500명 이상의 부대에 이것을 설치한다.

전항 이외의 부대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부대의 야전주보에서 주보품의 공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때는 소관 장관의 인허를 받아 해당부대에 야전주보를 설치할 수 있다.(중략)

야전주보는 이것을 설치한 부대장이 이것을 관리한다.(하략)

이 규정을 통해 대대 이상부대에 야전주보를 설치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부대에서 설치하려고 할 때는 관련계통을 통하여 신청하여 허가를 통해 받으면 가능하였다. 그리고 관리도 그 부대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오키나와 등지에서 볼 수있듯이 야전주

2) 사령부는 고등사령관이 군대에 대한 지휘·명령을 행하는 장소, 진영, 부대, 병단 또는 합대 등의 조직에서의 지휘기관이고 막료기관에 부속한다. 사령관은 작전, 동원, 경리 등을 담당하는 상급장교이고 통수 및 군정 상의 권한을 가진다. 구 일본육군에서는 여단 이상의 부대에 두었던 것을 사령부라고 칭하고, 연대, 대대 등은 본부로 칭하였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령부 내의 각부는 시대에 따라 변천은 있지만, 통상 참보부(막료), 부관부, 경리부, 군의, 수의부 및 법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부의 활동의 통합조정엔 참모장이 행하였다. 해군에서도 함대 등의 대부대의 지휘기관을 사령부라고 부르지만 육군만큼 복잡하지는 않다.

<https://kotobank.jp/word/%E5%8F%B8%E4%BB%A4%E9%83%A8-536080>에서 2016.8.19. 인출.

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중대 단위까지도 군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업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나. 개정 야전주보규정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6조 야전주보의 경영은 자영으로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경우(일부 음식물등의 판매를 제외하고)는 소관 장관의 인허를 받아 청부에 맡길 수 있다. 평시의 위수지(衛戍地)에서 동반하는 주보 청부인은 군속으로 취급, 일정한 복장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인원은 보병, 야포병 및 산포병 연대에 있어서는 3명 이내, 기타 부대에 있어서는 2명 이내로 한다.

위 내용을 통해 위수지에서 동반하며 군위안소를 맡긴 청부업자의 경우 해당 부대장에 의해 일정 수를 군속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도 군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졌다. 군위안소 업자에게 군속의 신분이 부여된 사례가 군인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고(長澤健一, 1983 : 223 ; 하종문, 2009 : 140), 이외에도 ‘육군요원’ 업자와 군 ‘위안부’를 함께 군 종속자로 표현한 문건도 있었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 167-168 ; 하종문, 2009 : 146). 결국 중일전쟁 이후 만들어진 육군위안소는 군의 병참시설인 야전주보의 부속 위안시설로, 그 경영을 수탁 받은 위안소 업자는 군의 청부 상인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속 신분이 부여되어 제복 착용이 허용되었다(나agai 가즈, 2012).

여기서 업자의 신분 변화와 위안소와의 관계를 문제제기해 보고 싶다. 앞서서도 군 주보의 청부업자로서 군속의 신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후쿠오카 연대의 어용상인으로서 동행한 이시바시 도쿠타로(石橋徳太郎)도 군속이었다. 그는 상해 병참사령부 주계장교에게서 한사람 당 전도금 1,000원을 건네받고, 15명씩 모아올 것을 의뢰받아 북큐슈에서 18명을 모아 상해로 갔다. 이 때 모아진 군 ‘위안부’들은 처음 병참사령부의 직영인 양가택(楊家宅) (동침가택(東沈家宅)이라고 하기도 함)을 거쳐 후쿠오카(福岡)연대를 따라 항저우(杭州), 광둥(廣東)으로 이동하였다(센다 가코오, 1991 : 57-201). 이때 이시바시(石橋)는 그 사이 완전히 매춘업소(女郎屋:조로야, 실제로는 군위안소로 보임) 주인이 되었다(秦郁彦, 1999 : 71-72). 이처럼 군속이 여자 공급책에서부터 군위안소 관리인으로 된 사례도 발견된다.

군위안소 업자가 군인이나 군속인 사례는 이 밖에도 있었다. 앞의 야전주보 규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초기나 지역에 따라 군인이 직영하는 위안소는 군위안소를 운영자는 군인이나 군속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일전쟁초기 상해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전장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확대된 시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마랑, 세레베스 등지에서도 확인된다(吉見義明, 1992 :

365-375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8 : 343-360). 여기서는 싱가포르와 스마랑의 사례를 들어보자. 싱가포르에 있던 일본군인은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주보(酒保) 근무를 희망, 반장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중략).... 부대 구내에 위안소를 개설하라고 해서, 일중한 삼국의 여성 집단 21명을 맡은 조로야(女郎屋, 매춘숙)의 주인(親父)까지 경험하게 되었다.’(최덕수·변은진·안자코 유카, 2002a)

위 회고담에서는 필자가 군인으로서 주보의 반장을 맡게 되었는데 위안소 개설 명령을 받아 구내에 군위안소 설치를 담당하였고 경영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했는지까지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위 말대로라면 군직영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군인이 직접 위안소를 관리하였던 셈이다. 이것은 중일전쟁 초기가 아니라 변화한 싱가포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4년에는 일본군 간부후보생대라는 교육부대가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에 네덜란드인 여성을 ‘위안부’로 삼아 군위안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를 스마랑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 패전 후 네덜란드군에 의해 군 ‘위안부’ 동원자와 군위안소 운영자 모두 전범재판을 받고 아래와 같이 실행을 받았다. 이때 군위안소를 운영한 업자들의 신분은 군속이었다.

〈표 1〉 인도네시아 스마랑 사건으로 처벌된 군위안소 운영 군속

군속 중 유죄판결자	인적사항(직책)	죄명	구형	판결
古谷巖	도쿄 출생, 1907.10.9.생 (군속, 스마랑구락부 업자)	매춘 강요	사형	20년
森本雪雄	와카야마현 출생, 1915.10.29.생 (군속, 히노마루(日の丸)업자)	매춘 강요	20년	10년/15년
下田眞治	와카야마현 출생, 1923.2.14.생 (군속, 靑雲莊 업자)	매춘 강요	5년	15년/10년
薦木健次郎	야마나시현 출생, 1909.1.24.생 (군속, 장교구락부 업자)	매춘 강요	5년	7년

자료: 坂邦康(1968). 蘭印法廷(一). p.12-13

秦郁彦(2012). “스마랑의慰安’たち~「靑壯日記」は語る-昭和史談”. p.443~444

이들이 앞서 언급한 〈개정 야전주보규정〉에 따른 군 청부업자로서 군속이 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군속이 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아에서는 특히 군인이나 군속이 군위안소를 관리·감독하는 업자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본군이 군의 부속시설로서 군위안소를 보았음을 확인해 준다.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여성을 강제로 군 ‘위안부’로 삼은 이 일본군 간부후보생대는 교육을 수행하는 부대였지만, 사령관 이하 부대원 전부 여기에 문제를 삼은 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의 군 ‘위안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볼 수 있다. 이 군 위안소는 육군성 부로관리부 小田島 董대좌 등의 의견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하여 짧은 기간만 존속하였으나 같은 지역의 다른 군위안소는 패전 때까지 그대로 존속하였다.

### Ⅲ. 일본 정부와 군의 군위안소 관련 호칭<sup>3)</sup>

청일전쟁 이후 의화단운동진압전쟁(義和團運動鎮壓戰爭),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군은 위안소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유사 위안소)을 이미 설치하고 이용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가 일종의 제도로서 가동되기 이전부터 일본군이 관할하거나 점령한 지역에서는 군 ‘위안부’제와 유사한 것이 가동하고 있었다(차경애, 2009). 그것은 일본 내의 공창제를 변형시킨 형태 등으로 존속하였다. 러일전쟁 후 관동주 민정서에서는 〈예기작부급고부녀취체규칙〉(1905.10), 〈창기취체규칙〉(1905.12)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일본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기 작부의 공창적 행위를 묵인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關東局施政30年史, 1974 : 799 ; 秦郁彦, 1999 : 47에서 재인용).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한국강점 전 조선의 일본인 거류지, 나아가 중일전쟁기 만주나 중국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공창제와 같은 내용의 운영을 하여도 용어는 공창제의 핵심인 창기라는 명칭은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물론 일본정부가 국제법상의 복잡한 문제를 피하려는 알뜰한 미봉책이었고, 작부나 예기가 창기보다 낮은 연령부터 가능하여 연령 제한 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자와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1931년 말 상해에서 해군위안소로 분류된 세 곳은 이전부터 있었던 가시자 시키(貸座敷, 貸席. 이하 대좌부)를 상해시의 폐창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개칭한 것이었다. ‘을종 예기’(실제로는 창기)도 ‘작부’로 호칭을 바꾸었다(秦郁彦, 1999 : 68-70 ; 藤永壯, 1995 : 112-127).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위안소’나 ‘예기·작부’로 이름바꾸기를 한

3) 이 절은 姜貞淑(2015:60-66) 중 업자와 관련한 내용 중 일부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일본군의 행위 내용과 의미이고, 군위안소 업자를 어떻게 명명하였는가라는 부분이다.

유엔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이 강간센터라고 규정한 곳을 일본 육군과 해군이 위안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현재 확인되는 기록으로는 1932년 상해(上海)에서부터였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위안소’라는 용어이다. 우리가 위안(慰安)이라는 단어에 별 거부감이 없듯이 위안소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휴식장소, 집이나 휴양지라는 의미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군에서 이 용어를 끌어다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배경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도시 상해가 가진 특수성과 구미의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국제적으로 공창제가 폐지되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던 당시의 국제적 경향을 거슬러, 일본정부 스스로도 공창제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미의 비판을 피하고자 일본군은 이 모호한 ‘위안소’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아무튼 위안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1932년부터 일본 패전시기까지 공문서에 나타난 업자·‘위안부’·위안소 등에 준한 명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명칭은 관계부서가 군 ‘위안부’제나 업자 등을 어떻게 보는가도 잘 보여준다.

우선 일본 정부 최고기관이라 할 내무성, 외무성, 육해군성, 각의결정 등과 방면군이나 파견군 등 군 상층부에서 사용한 군위안소 관련 명칭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3>은 사단 이하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체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제가 형성된 것은 1938년 전반기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12월 중국에 있던 일본군의 요구가 일본의 내무성과 각 현(縣)에 개별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1938년 2월 23일 일본 내무성이 육해군성과 국내 지방의 각 현, 척무성(拓務省)이 외지(外地: 조선 대만 등)로 방침을 하달하고<sup>4)</sup> 일본 내무성의 방침을 수용한 일본 육군성의 동의(1938.3.4 육군성 부관 통첩) 이후 본격적인 일본군 ‘위안부’제가 가동되었다.

군 ‘위안부’제가 수립된 이후 군의 성욕해결을 위한 일본군 시설의 이름은 ‘유곽(遊廓)’, ‘대좌부(貸座敷)’, ‘구락부(俱樂部)’ 등의 용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나, 거의 ‘위안소’로 용어가 통일되어 갔다. 그런데 그 시설 속의 여성을 가리키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위안소에 비해 용어의 출현도 낮고 일본이 패전할 시점까지 다른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4)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의 발굴에 따라 좀더 논의가 필요하나 필자는 1938년 2월 18일 내무성 문건은 외무성 육군성 척무성 등지로 전달되었다고 본다.

〈표 2〉 일본정부 및 군 중앙의 군위안소 관련 명칭

연월일	작성자	업자·'위안부'·위안소 명칭			문서명(출처)
1932.04.01	上海派遣軍	경영자, 영업자	접객부	영업가옥	• 軍娛樂場取締規則(秦郁彦, 1999 : 411)
1938.02.07	和歌山縣知事	영업주/모집자, 포주	작부, 창녀, 위안부녀, 가업부녀	황군위안소, 군위안소, 대작부, 육군위안소	•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關スル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27-46)
1938.02.23	內務省警保局長	대작부유사영업자, 부녀모집 주선자	창기,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	요리점, 대작부	•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69-76)
1938.03.04	陸軍省	모집(자)	종업부	위안소	•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ニ關スル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3-7)
1938.04.16	南京總領事館 (3省合意)	업자	영업자	군전속 특수/ 특종위안소	• 在留邦人ノ各種營業許可及團東ニ關スル陸・海・外三省關係者會同決定事項(吉見義明, 1992 : 177-80)
1938.05.25	教育總督部本部長	-	매소부(賣笑婦)	위안소	• 戰時服務提要(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9-19)
1938.11.08	內務省警保局長	인솔자(포주)	추업부(醜業婦), 창기	군위안소	• 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7-104)
1942.01.14	外務大臣	-	위안부	-	• 南方方面占領地ニ對シ慰安婦渡航方ノ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165-166)
1942.09	支那派遣軍總司令部	위안소 경영자	작부	특종위안소	• 昭和一七年九月副官會同席上意見、質疑及回答(追加)(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17-20)
1943.11.11	馬來軍政監部	위안시설의 경영자, 영업자, 영업경영자, 고주, 영업주	작부(酌婦), 종업부(従業婦)	위안소(慰安所)	• 及旅館營業管理規程制定ノ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21-43)
1944.01.06	閣議決定	-	작부(酌婦), 여급(女給)	위안소(慰安所)	• 第二次許可認可等行政事務簡捷化ニ關スル件(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8:33-42)

〈표 2〉에서 보듯이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과 일본군 상층부에서는 군위안소에 대해서는 1932년 해군이 처음 사용되었던 위안소라는 용어가 일본군 전체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예기(藝妓), 작부(酌婦), 종업부(從業婦), 영업자(營業者), 매소부(賣笑婦), 위안부(慰安婦)라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일본 내무성이 창기(娼妓) 혹은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를 대상으로 동원하며 공창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 문건에서는 창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여성의 외지로의 이송은 국제법에서 금기시 되었고 특히 성매매여성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민감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동하는 여성들이 공창제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외국에 주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위의 통일적인 용어로까지 발전하진 못하고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최상층 기관이라 외무성에서 1942년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업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붙였는데 1932년 상해파견군이 〈군오락장취체규칙〉에서 '영업자'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위안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경영자라는 용어보다 영업자라는 용어로 고정하여 사용하려고 한 면이 보인다. 위 표에서 인술자 등의 표현은 배치지의 위안소 업자만이 아니라 여성동원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들에 대한 명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군 '위안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본군 문건에서 업자에 대한 언급이 적거나 없는 것은, 일본군의 목적은 여성동원이 우선적이었고 업자와 관련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필요에 따라 업자는 군, 군속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연유로 업자가 일본군 '위안부'제 운영에 핵심으로 자리잡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래 〈표 3〉은 육군 사단 이하 부대단위에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것인데, 상급기관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초기 1933년 공창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만주지역에 있던 혼성제14여단에서 '위안부'를 창기 예기, 위안소를 기루, 위안소 업자를 누주라는 용어를 썼다.

〈표 3〉 사단 이하 일본군 군위안부 관련자 명칭

연월일	작성자	업자·'위안부'·위안소 명칭	문서명(출처)
1933.04.	혼성제14여단 사령부	누주 (樓主)	창기, 예기, 작부 기루 • 衛生業務旬報(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8:167-72)
1938.03.16	독립공성중포병 (獨立攻城重砲兵) 제2대대	누주	영업자 위안소 • 常州駐屯間内務規定(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 251-258)
1939.06.07 /11.14	독립산포병 (獨立山 砲兵) 제3연대	경영자	위안부 위안소, 특수위안소 • 獨立山砲兵第三隊陣中日誌(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311-320, 327-336)
1942.08.16	마스바데도 경비대장	접수 [受付]	위안부 위안소, 구락부 • 軍人俱樂部規定(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149-151)
1943.05.26	만다레주둔지 사령부(소장)	누주, 영업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부 위안소 • マンダレー駐屯地慰安所二關スル規定(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8:285-287)

본격적으로 군위안소가 설치된 중일전쟁 이후 군문서 중 관련 용어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군위안소 규정들이 있다. 내용이 확인된 것들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인 몇 개를 통해 군과 군위안소업자의 관계, 군의 업자에 대한 지시나 요구하는 바, 업자와 군 '위안부' 관계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독립공성중포병제2대대(獨立攻城重砲兵第二大隊)는 중일전쟁 이후 군위안소 설치 초기의 군위안소 이용규정을 보여준다. 1938년 1월 위 부대는 화류병에 대한 군의의 점검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위안부'를 '병참창기'라하고 하였으며 군위안소 특히 업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 225-232), 3월에 이르러 이 부대는 상주주둔간내무규정(常州駐屯間内務規定)을 만들었는데 그 중 〈위안소 사용규정〉이 있다. 그 내용은 위 부대의 위안소 설치 장소와 위안소 이용시간, 사용일, 사용료, '위안부' 위생검사, '위안부' 생활 전반에 대한 명령과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업자와 관련되는 것은 "위생상에 관해 누주(樓主)는 소독설비를 하여 두는 것으로 함"이란 내용뿐인데 이 역시 일본군이 업자에게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부대에 있어 업자는 일본군의 명령을 수행하는 매우 보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부대가 관할하는 위안소만의 특성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군위안소가 처음 만들어진 중국 중부에서는 위 부대와 같이 다수의 부대가 상당기간 주둔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만들어진 군위안소 규정들이 나오는데

〈모리카와 부대 특종 위안업무에 관한 규정(森川部隊特種慰安業務二関スル規定)〉도 그 중의 하나다. 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부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1939년 6월 7일 독립산포병 제3연대(獨立山砲兵第三聯隊)에서 처음 ‘위안부’라는 용어가 나온 이후 다수의 하위부대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b: 311-320). 이 용어가 일본군내에서 통일된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 일본정부나 군중앙에서는 패전기까지 ‘위안부’라는 용어로 통일하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다.

내무성과 외무성 그리고 육해군성 중 국제법에 가장 민감하였던 외무성에서만 1942년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다. 국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내무성 공문과 달리, 외국에서 일본으로 또 그 역으로 보내는 외무성 문건에서 일반공창제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분명 일반 공창제와 별도의 것으로 보이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연합군 측은 “‘위안부’는 장병을 위해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는 매춘부, 결국 ‘종군매춘부’이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군 특유의 것이다. 이 보고 이외에도 일본군이 전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어떤 곳이라도 ‘위안부’가 있다”라고 연합군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49호, 1944.10.1.)(吉見義明, 1992: 441)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군의 특수시설로 되어 있던 군위안소, 군 ‘위안부’제 작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사단 이하 일본군에서는 업자에 대해 ‘누주, 경영자, 영업자, 접수(受付) 등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일본군 개인의 일상에서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위안부’의 호칭은 작부·예기 등으로도 불렸지만 군인 사이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점차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정부가 공창제 확장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 의도와 일본군 사이에서도 창기 등 유곽이나 기존 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호칭 대신 적합한 용어로 ‘위안부’가 선택되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일본이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 18일 연합군이 이용할 위안소 설치명령이 나오고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會)에서 여성을 모으게 하였는데 이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하였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5) 일본 위키피디아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會) 검색자료.

<https://ja.wikipedia.org/wiki/%E7%89%B9%E6%AE%8A%E6%85%B0%E5%AE%89%E6%96%BD%E8%A8%AD%E5%8D%94%E4%BC%9A>에서 2017.10.31. 인출.

#### IV. 전쟁터에서의 군위안소 업자

일본군의 요구에 조용하여 전쟁 일선에 만들어진 일본군위안소에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자는 일차적으로 군위안소 업자였다. 군위안소 업자의 지위나 역할은 군위안소의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업자가 일본군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군위안소를 운영하는 것은 당시 기본적인 의무였다.

중일전쟁 초기 군 ‘위안부’ 동원과 결합하여 군위안소 업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아래 자료이다. 중국 상해(上海)총영사관에서 나가사키현(長崎県)을 거쳐 군마현지사(群馬縣知事)에 까지 전달된 〈상해파견군내 육군위안소 작부모집에 관한 건(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關スル件)〉(1938.1.19)은 일본군과 외무성 산하 상해총영사관과 일본 내무성 산하 나가사키현 등을 매개로 한 ‘위안부’ 모집의 초기 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중국에 있던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외무성, 내무성 등의 하부기관이 움직여 일본 내의 업자를 선정하고 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즉, 위안소 작부 3천명 모집이송 계획하에 1937년 12월 중순부터 2, 3백 명이 이송되었다. 1월 26일엔 2 차로 대좌부업자가 상해육군특무기관 의뢰를 받아 모집된 작부를 군용선으로 보낼 계획이었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 11-22). 고베(神戸)의 대좌부업자 오우치(大内)는 수십명의 창기를 데리고 있던 업자로서 군마(群馬)현 마에바시시(前橋市)의 예창기작부 등 소개업자 소리마치(反町)와 상해 재주의 고베출신 대좌부업 나가노(中野)를 통하여 관련업자에게 여성들의 동원을 의뢰하였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 11-13). 여기서 모집업자로는 대좌부업자, 소개업자 등이 가동되고 있었다. 일본군과 직접 연결되어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위안부’가 될 여성(작부) 사이의 계약조건에 ‘식비 의상 및 소모품은 포주의 부담으로 한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 14) 등의 내용이 있었다.

‘위안부’ 동원업자는 소개업자와 군위안소 업자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모집부터 군위안소 관련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쟁터에서 일본군이 요구한 군위안소 업자의 역할에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군위안소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보았다.

각종 위안소 규정의 내용은 부대마다 차이가 있다. 부대별 위안소 규정 분석은 또 하나의 연구과제다. 거친 상태로나마 위안소 규정을 정리하면,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은 위안소 장소, 이용 요일과 시간 및 금액, 이용자 태도(복장,

금주, 규정시간 준수, 폭력금지 등), 샷쿠 사용, 소독액 비치, 정기적인 검미, 군위안소 청결유지, 군 ‘위안부’의 외출금지 혹은 외출범위 등을 정하였다. 군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군위안소 규정의 많은 부분은 군위안소 업자와 군 ‘위안부’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내용이다. 군 ‘위안부’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라든가 군위안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는 군위안소 업자의 일일 수박에 없었다.

샷쿠는 부대에서 배부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위안소 사무실에서 배분되었다. 업자는 군 ‘위안부’ 및 군위안소 위생관리를 담당하였다. 나아가 군과 함께 군 ‘위안부’의 외출통제 등도 그들의 업무였다. 일본군이 군위안소 이용규정을 정하면 이는 군인군속만이 아니라 군위안소 업자에게도 하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돈의 흐름이다.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한 군위안소 업자가 전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군위안소 업자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광둥(廣東)의 독립보병 제13 여단 도야마대(獨立歩兵 第13旅團 遠山隊)는 「외출 및 군인구락부에 관한 규정」(1944년)에 의거하여 매일 「군인구락부 영업주는 별첨의 제1일보를 다음날 오전에, 또한 별첨 제2일보를 다음달 2일까지 경비대로 제출」하도록 하였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 277-283). 보고 내용은 매상내역으로 매상액, 등록인원, 샷쿠사용 수 등이었다. 업자가 군의 군위안소 담당자에게 보고할 의무는 마래군정감, 미얀마 만달레이 등의 자료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군위안소 업자의 수입은 군인들이 군위안소를 이용하였다고 군이 지불한 것이 바로 업자의 수입이 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이나 군에 따라 상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래 자료에 의하면, 군에 대한 보고 후 혹은 군의 배분조치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해군 제12특별근거지대사령부(第12特別根拠地隊司令部)의 「해군위안소이용내규(海軍慰安所利用内規)」(1945년 3월 18일)(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 479-482)을 통하여 보면 ‘해군위안소의 관리 경영은 해군사령부에서 일괄하여 행’하였는데 위안소로 할 가옥은 군에서 업자에게 무상 대여하였다. 5개의 관할 군위안소 중 준사관 이상이 사용한 ‘학(鶴)의 집’, ‘구(龜)의 집’에 대한 기술에서 사용비용과 그것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 정한 내용도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1) 이용자 본권(本券) 구입, 2) 위안소 업자에게 줌, 3) (군위안소 업자가 모은 이용권을 각 부대장에게 내고) 각 부대장은 위 요금을 모아 별지 양식의 조서와 함께 2개월마다 회계장 앞으로 보냄, 4) 업자에 대한 지불은 매월 1개월 간 매상액에서 생활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모든 군위안소

가 이러한 방식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군에 의해 활동비를 지불받는 것이 된다. 물론 여기서 업자의 자율적 활동에 의해 올리는 수익의 증가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의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연결되긴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군의 재량에 의해 수입과 관련된 규정이 정해지고 군이 제공하거나 직접 만든 군위안소를 운영하고 있던 업자는 특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기 어렵다.

전쟁터에서 군위안소 업자는 특수한 취급을 받았다. 〈한커우(漢口)공략후 방인 진출에 대한 연락회의결정 응급처리요강〉(1938.9.14)에 의하면 ‘한커우에 진출하려고 하는 방인에 대해서는 군수(軍需)의 충족과 부흥의 촉진을 주안으로 하여 소요통제를 가한다’는 방침 하에 아래 요령을 제시하였다.

1. 한커우(漢口) 거류민 복귀는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군대 또는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종사자, 음식점업자, 여관업자 및 민단 역원 운수업자 등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류민 중 유력자 수명은 특무부의 진출에 응하여 이에 수행을 허가하고 한커우의 부흥, 물자의 공급, 복귀거류민의 지도 등에 대하여 특무부를 보좌하도록 한다.
3. 거류민 이외의 진출은 복귀희망 거류민의 수송에 여유가 생긴 이후에 진출 후 속히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부터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단 군대 위안소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이하 생략)

위 요령은 일본군이 점령지에 들이는 ‘방인’(邦人, 일본 본토인 및 식민지인)의 순서를 보여준다. 한커우(漢口) 공략 이전에 있었던 군 관련자 및 군인상대 상업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한커우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새롭게 가려는 자는 기존 거류민 복귀 이후로 돌렸지만, 군위안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우선적으로 허가하였다. 이 결정은 외무성 대신까지 보고가 올라간 연락회의 결정이므로 다른 지역, 적어도 중국 중부지역에는 적용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군위안소업자들에게 ‘진출’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점만이 아니라, 〈표 4〉의 군 ‘위안부’ 업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중부지역의 조선인 거류민 중에선 위안소 관련한 전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군위안소 업자 중에는 다른 직업군에서 군위안소 업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이는 전황에 따라 전선에 있던 일본군이 일상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잘 안될 경우에는

오키나와에서처럼 군과 ‘위안부’가 직접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 372). 아래 〈표 4〉는 위안소 업자들이 지역에 따라 전업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군위안소 업자 중 전업 사례

이름	장소	영업내용	원자료 출처
정이월	중국	위안소 →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島津長次郎(1939). 支那在留邦人人名錄. 第29版. p.23. 上海: 金風社</li> <li>楊昭全(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 上冊. p.77-78.</li> </ul>
박일석 (新井日碩)	중국	카페 → 위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白川秀男(1941). 在支半島人名錄. 第2版. 白川洋行. p.74.</li> <li>白川秀男(1944). 在支半島人名錄. 第4版. 白川洋行. p.71.</li> <li>朝鮮總督官房外務部(1939). 中華民國在留朝鮮人概況 p.46.</li> <li>島津長次郎(1939). 支那在留邦人人名錄 第29版. p.358. 上海: 金風社</li> <li>島津長次郎(1940). 支那在留邦人人名錄. 第30版. p.16. 上海: 金風社</li> <li>楊昭全(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 資料匯編 上冊. p.26, 93.</li> <li>이구홍(1979). 한국이민사. 중앙신서. p.685.</li> </ul>
김귀락 (金澤貴樂)	중국	위안소 → 요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白川秀男(1944). “金華鷄林會 名簿”. 在支半島人名錄. 第4版. 白川洋行.</li> </ul>
김만복 (金本一成)	중국	카페 → 위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島津長次郎(1942). 支那在留邦人人名錄 第32版. 上海: 金風社</li> <li>白川秀男(1944). 在支半島人名錄. 第4版. 白川洋行.</li> </ul>
김동준 (金山東俊)	중국	위안소 → 화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金華鷄林會(1944). 金華鷄林會會則級名簿. (박정애(2017)에서 재인용)</li> <li>白川秀男(1944). 在支半島人名錄. 第4版. 白川洋行.</li> </ul>
박00	미얀마, 싱가포르	미얀마, 싱가포르 위안소업자 → 해행사직원 → 위안소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병직(2013:137)</li> </ul>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소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거나 다른 직업에서 위안소업으로 전업한 사례는 정이월, 박일석(新井日碩) 김귀락(金澤貴樂), 김동준(金山東俊), 김만복(金本一成), 박○○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 응급처리요강의 내용이나 일본군의 규정과 이익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정 일정한 실업 경험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개업허가신청서, 영업계획서, 선서서, 이력서를 마닐라 지구 병참담당장교에게 제출하고, 개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필요 종업원 수를 확정하고 종업원 일람, 종업원 이력서 및接客부(예기 및 작부)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준비 완료시에는 마닐라 지구 병참담당장교에게 통지하고 시설검사와 종업원 건강 진단 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7 : 182). 또 중국 우한(武漢)이나 필리핀 파나이섬 세부섬 등에서는 조합이 결성되었다. 특히 파나이섬 세부섬은 사업통제회가 결성되고 거기에 다시接客업 조합이 결성되어 그 가입자들이 군위안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7 : 185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c : 201-203).

군위안소를 가 보았거나 가까이에서 보았던 군인군속들은 군위안소 업자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고대 한국사연구소에서 번역한 일본인 군인군속의 회고담(최덕수·변은진·안자코 유카, 2002a)과 원자료를 보면 일본인 군인들은 군위안소 업자를 업자(知久正三郎沼田誠, 1983 : 144-145 ; 戸井昌造, 1986 : 97), 경영자(香川県ビルマ会, 1990 : 394 ; 鈴木卓四郎, 1984 : 76), 주인(堀口正夫, 1987 : 35 ; 知久正三郎.沼田誠司, 1983 : 144 ; 榊山潤, 1963 : 55), 고주(雇主:주인)(知久正三郎沼田誠, 1983 : 144-145), 포주(知久正三郎沼田誠, 1983 : 144-145) 등으로 불렀다. 한국인 전 군속 성태섭은 업자를 ‘주인’이라고 주로 사용하였고(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9 : 353-371), 포로감시원으로 팔렘방에 있었던 김갑천은 ‘업주’와 ‘관리인’이라고 불렀다(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 276). 일본정부나 군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자의 명칭은 실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인 군속 개인이 업자를 부를 때는 주인이나 고주·포주 등 소유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군인군속들의 주 관심사가 여성에게 있었던 까닭인지 업자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언급한 경우에는 꽤 포괄적으로 보는 시선을 가져 당시 상황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 군인군속이 기억하는 업자들의 모습, 군과 업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사례만 살펴보자.

사례 1) ‘소코레’에서도 부대가 하차한 석덕(石德)선 건설 시에는 위안부와 업자(모두 한국인)가 같이 따라 다녔다(중략). 이동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 트럭에 마치 은닉 물자라도 취급하듯이 이들 여자와 고주(雇主) 남자가 비밀리에 실려서 부대 뒤를 따라왔다(중략). 위안부 고주는 7엔 50전 지불하면 그 중에서 2엔 50전을 담당 하사관에 주었다(중략). 위안부 관리는 주보품과 같은 취급이며, 그녀들의 급양(給養)은 주보품 전표로 처리되었다고 한다(知久正三郎·沼田誠司, 1983:144-145).

사례 2) 랭군 시내에 기독교청년회관이 있었다. 조선인 여자부대가 도착해서 그 여자부의 전관이 창관(娼館)이 된 것은(중략). 아리랑 부대는 公許다. 창관의 주인이 군과 결탁해서 돈벌이에 앞선 것이니까(중략) 창관 주인의 이득을 군이 보호해준단 말인가(樺山潤, 1963:54-55).

사례 3) 조일정(朝日亭)의 경영자인 소천(小泉)은(중략) 재대 중부터 잘 알던 조선계 육군 위안소 ‘복산(福山)’에 장부담당으로 취직하여 섭외, 회계, 경영까지 맡았고, 이른바 지배인적인 존재가 되었다(중략). 다행히 당시 주류부대였던 대만군 병참부와 접촉해서 영업 허가의 전제인 작부 호기증명서를 얻었다(당시 군위안소의 영업허가는 형식적으로는 지구헌병대장을 경유해서 지역경비부대장의 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헌병대장이 통과시킨 것은 무조건 허가되었다). 그가 조선, 대만 등에서 겨우 10명 정도의 작부를 모집해서 해남도에 돌아온 것은 올해 6월경이었다(鈴木卓四郎, 1984:78).

사례 1은 업자와 ‘위안부’가 부대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군의 수송수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군의 이동수단을 사용한 것은 1938년 일본정부 자료에서부터 업자와 군 ‘위안부’를 군용선으로 이송하였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이고 육로 수송에서도 군의 일부처럼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군위안소 업자와 군 사이의 돈의 순환이다. 위 사례 1자료는 매우 제한되어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군과 업자, 여성동원과 관련하여 다른 공문서에서 확인된 사실을 좀 언급해두고 싶다.

1938년 일본군이 일본 및 조선에서 대단위로 군 ‘위안부’를 동원하려고 할 때 돈은 분명 일본군에서 나왔다. 당시 움직였던 대좌부업자 오우치가 유관업자들에게 제시한 모집조건은 ‘전차금은 500엔으로부터 1,000엔까지, 가업년한은 2개년’ 등이었다(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7a: 19). 분명 이때 모집여성들의 전차금은 업자들이 전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일본군에서 부담하였다고 본다. 이는 상해직영위안소를 만들기 위

해 어용상인 이시바시 도쿠타로(石橋德太郎)를 후쿠오카로 파견할 때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제11병참사령부가 돈을 주어 여성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에도 잘 나타난다(센다 가코오, 1991 : 57-58, 83-84). 또 1945년 내몽고군에서 조선총독부로 송금한 사실이나(방선주, 1992 : 237-238, 2001 : 3 ; 姜貞淑, 2005 : 72-77), 화이하이성(淮海省)<sup>6)</sup> 연락부(7990) 부대에서 안산(鞍山:현 랴오닝성 안산) 경리사령부로 송금한 사실(장앤, 2015 : 167-171) 등을 통해서도 일본군과 후방쪽으로 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군에서 돈을 지불한 사실은 확인된다. 관련연구자들도 임시군사비 등 국고에서 지출되었다고 본다(센다 가코오, 1991 : 84 ; 秦郁彦, 1999 : 104 ; 강정숙, 2010 : 74). 물론 소규모 단위에서 업자가 여성을 전차금도 없는 사기적인 인신매매 방식을 취하거나 전차금을 지불하고 동원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대규모 동원과정에서의 여성동원 비용은 일본군의 임시군사비 등을 통하여 융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과제라 여기서는 이 정도로 지적만 해 두기로 하자.

사례 2는 미얀마 랑군의 기독교청년회관을 군위안소로 내준 군을 보고 군위안소 업자와 결탁하여 돈벌이를 허용해준 사실을 한탄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군위안소 설치는 낯선 곳으로 온 업자가 군위안소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군이 이미 장악한 영역에서 적당한 시설을 확보하거나 만들어서 군위안소 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사례 3은 복산(福山)이라는 육군위안소에서 고용되어 있다가 독립하여 창업하려는 고이즈미(小泉)라는 업자가 여성을 동원해서 군위안소 조일정(朝日亭)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 고이즈미는 조선인위안소에 고용된 점이나 여성 모집지가 조선과 대만이었던 점으로 보아 조선인 업자였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터에서 군위안소 업자는 다른 직업군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또 위의 고이즈미나 이종운과 같이 군위안소 고용인에서 독립된 군위안소 업자가 되기도 하였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1999 : 284-87). 물론 여기에는 일본군의 허가가 전제된다.

일본군위안소에 관해 관련기관의 기록만으로는 실상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크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주체의 경험과 인식, 당사자의 시선이 중요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건은 더욱 그러하다. 군위안소 업자가 실제 전쟁터에서 군 '위안부'로 된 여성들의 생활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는 군 '위안부' 피해자의 솔직한 목소리가 아니면 그 아픔의 정도를 느끼기 어렵다.

6) 화이하이성(淮海省)은 1944년 중국 괴뢰정부가 만든 성으로서 쉬저우(徐州) 부근이다.

군위안소 업자는 어떤 종류의 군위안소의 업자인가에 따라 군이나 군 ‘위안부’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성병예방과 성욕해결 등의 일본군의 의도에 따라 동원되어 온 여성들은 군위안소에서 강간, 매춘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군위안소를 운영하는 업자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려웠다. 그리고 일본군의 군위안소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업자 개인의 이익 추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군 ‘위안부’에게 업자는 가장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이라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군위안소 업자는 그들의 구술을 통해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 증언을 기초로 분석한 글로는 신영숙·조혜란(1997), 여순주(1997), 윤명숙(2015) 등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다룬 공문서와 군인군속의 회고담 및 구술을 결합하여 군위안소 업자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한다.

한국에서 증언을 한 이들은 공권력과 관련하여 동원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장이나 돈벌이가 좋은 곳이라는 것에 속아서 간, 즉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에 의해 군 ‘위안부’로 간 이들이 다수이고 전차금이라는 것도 전혀 받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 ‘위안부’에 준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인식한 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들이 동원될 때 동원업자와 군위안소 업자가 다를 때, 군위안소 업자에게 인계되는 시점은 배로 이동할 경우는 대부분 배에 승선하는 시점이었다. 육로로 이동하는 만주의 경우는 소개업자나 초기 동원업자가 배치장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배로 이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산까지 이동한 이후 군위안소 업자에게 인계되었다.

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군 ‘위안부’화 과정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은 성병 검사와 성폭행을 당한 첫 경험이다. 때문에 이러한 처지로 몰고 간 군위안소 업자나 동원업자가 피해자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군위안소에서의 생활에서 군위안소 업자들은 앞에 언급한 일본군 규정, 군위안소 설치 목적에 따라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제 조치를 해야 하는 한편 일본군 성욕 해소를 효율적으로 하여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군 ‘위안부’ 사이의 경쟁심을 이용하거나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꾀하기도 하였다.

중국 중부로 배치되었던 배족간은 “중국 진송(陳村) 시절부터 ‘위안부’ 여자들에게도 계급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는 위안소 관리인이 시켜서 하였고 여자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었다.(중략) 계급이 높았던 이유는 경력이 제일 오래 되어 군인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계급놀이가 아니라 군인처럼 “매일 오후 4~5시가 되면 점호를 하고.(중략) 이 때 ‘위안부’ 여자들 중 말 안 듣는 여자들을 때리기도” 하는 등 이들은 군 ‘위안부’ 사이에

종적 관계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징벌행위까지 하였다. 이 정도로까지는 아니어도 군위안소 업자가 경쟁을 통해 여성들이 더 많은 군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자주 발견된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지원을 위해서 “돈이 생기면 비행기를 사라든지 전쟁에 보태 쓰라고 나라에 바쳤다. 물론 돈을 바치라고 강제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2엔씩 두 번 바쳤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1997 : 177-178) 이처럼 군 ‘위안부’로 있으면서도 업자를 매개로 하여 일본군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이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웠다. 조남례는 중국에서 군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군인에게서 받은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면, 나중에 계산해 빚을 까 나간다고 했지만 처음 생긴 빚은 계속 늘어갔다. 옷 사고 화장품도 사니 빚은 줄기는커녕 늘어났다(중략). 빚은 주인을 옮겨도 그대로 떠안고 가는데 나는 만주에서만 네 번 정도 옮겼다. 마지막으로 수라바야의 일본놈 주인에게 넘겨졌을 때까지 빚이 남아있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1999 : 268)라고 하였다. 군위안소 업자는 전차금을 가진 여성일지라도 일정 계약기간 이후 혹은 전차금을 다 갚으면 해방시켜주어야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등 원거리에서 군 ‘위안부’를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정이 어둡고 비식자층이었던 여성들을 속여 빚을 여러 방법으로 늘려서 군 ‘위안부’ 여성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업자층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군 ‘위안부’ 여성들도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군위안소 업자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영이(가명)의 사례가 그러하였다. 그는 “해남도에 2년 쯤 있었을 때 한국인 부부였던 주인은 돈을 벌어서 나가고, 그때 합천사람으로 나보다 예닐곱 살 정도 더 먹었던 한국인 조바 이종운이 우리를 인수했다(중략). 이종운이 수마트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갔다.” “메단에서 2-3년 있었을 때(중략), 주인과 살림을 차렸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1999 : 266-68)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군 ‘위안부’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 소규모 군위안소의 업자들 중에서는 군 ‘위안부’ 중에 현지처로 삼아 군위안소 운영의 편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주로 확인되는 사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금통장을 업자가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라바울에 있었던 박순애(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 250)나 수마트라의 하영이 등이 그러하였다. 하영이는 업자의 현지처가 되었기 때문인지 배분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다. “수마트라에서도 군표를 받았다.(중략) 군인이 군표를 가져

오면 주인이 사무실에서 표를 내주고 그 표를 여자가 받았다. 딱지 같은 표(중략)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그 표를 세어가지고 돈 계산을 했다. 딱지 수대로 장부에 기록한 후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해서 수입의 6할을 받았다. 그리고 은행 같은 곳에 가서 저금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문옥주나 군위안소 업자 일기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패전 이후 그들의 저축이나 군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피해자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왜 “일본이 이기라고 기도” 하였는지, 중간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왜 못 돌아왔는지, 왜 “일본도 나쁘지만 그 앞잡이짓을 한 조선사람이 더 밉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 52-57)라고 했는지 피해자들이 한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민족·계급문제가 주요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때는 민족문제가 균형을 깰 정도로 강조되어 계급문제, 민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아 별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관련되어 군위안소 업자 연구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이나 일제에 의한 피해는 강조되나,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연행과정, 배치지에서의 군 ‘위안부’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초기 연행과정과 관련한 몇 개의 연구가 있을 뿐 귀환까지의 전체적인 연속성을 시야에 두고 이루어진 연구가 드물다.

어떠한 제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제반관계나 과정 등을 함께 관심 기울이지 않고서는 전체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업자라는 존재를 주목한다는 것은 일본군과 피해자 사이의 일본군 ‘위안부’제의 작동의 중간고리 부분을 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글 1장에서는 일본정부, 육군성에서 군 ‘위안부’제 가동을 위해 어떠한 과정과 규정에 기초하였는지, 그리고 군위안소 업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37년 개정된 <야전주보규정>은 군에 위안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군위안소 운영주체와 종사자 등의 범위 등을 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전쟁이 실제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군위안소는 일본 육해군에 있어 필수 시설로 되고, 일본군에서 요구하는 군 ‘위안부’ 동원을 위한 제 장치는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요구에 대해 내무성 외무성 등 일본정부와 식민지

관련기관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 군 ‘위안부’를 동원하도록 지원하였다.

군 ‘위안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본군 문건에서 초기 동원과정을 제외하고는 관련업자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다. 이것은 일본군에 있어서는 여성을 동원하여 전지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위안소 업자는 군, 군속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대부분 준군속의 위치에 있고 월등하게 큰 권력을 가진 군과는 별도의 갈등의 여지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에서 하지 못한 작업은 일본군위안소가 여러 형태가 있는 만큼 업자의 유형도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업자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이를 분리해서 보는 작업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후 군위안소 업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숙(2001). “일본조사보고기 : 오키나와로 조선인 여성을 연행한 업자 우라베(占部公)을 찾아서”. 정신대연구소소식지. 서울 : 한국정신대연구소. 제37권. 12-14.
- \_\_\_\_\_(2004).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40권. 257-290.
- \_\_\_\_\_(2010).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1).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명부를 통해 본 군‘위안부’동원”. 지역과 역사. 제28권. 277-317.
- \_\_\_\_\_(2012).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천안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41집. 275-316.
- \_\_\_\_\_(2015). “일본군 점령지 인도네시아에서의 군‘위안부’동원의 특성-인도네시아인과 네덜란드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학술회의 발표원고. 79-114.
- 박유하(2013).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서울 : 뿌리와이파리.
- 박정애(2017). “중국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의 위안소와 조선인‘위안부’-‘진화계림회 명부(金華鷄林會 名簿)’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7권 제1호. 53-97.
- 방선주(1992).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국사관논총. 국사편찬위원회. 제37권. 221-255.
- \_\_\_\_\_(2001). “내몽고 장가구(張家口) 일본군의 위안부 수입”.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식지. 서울 : 한국정신대연구소. 제30권 제3호
- 센다 가코오(1991). 중군위안부. 이송희(역). 白書房.(千田夏光, 從軍慰安婦—“声なき女” 八万人の告発, 双葉社, 1973).
- 신영숙·조혜란(1997). “일제시기 조선인 ‘군 위안부’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서울 : 아세아문화사. 215-267.
- 안병직(2013). 군위안소 관리자의 일기. 서울 : 이숲.
- 여순주(1997). “일본군 위안부 생활에 관한 연구”.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편). 서울 : 역사비평사. 119-140.
- 요시미 요시아키(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이규태(역). 서울 : 小花.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 윤명숙(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최민순(역). 서울: 이학사.  
(尹明淑,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明石書店, 2003).
- 이인선·황정임·양애경·김동식·강정숙·조운주(201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일본 위키피디아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검색자료. <https://ja.wikipedia.org/wiki/%E7%89%B9%E6%AE%8A%E6%85%B0%E5%AE%89%E6%96%BD%E8%A8%AD%E5%8D%94%E4%BC%9A>에서 2017.10.31. 인출.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9.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9). 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조사.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정영환(2016).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임경화(역). 서울: 푸른역사. (鄭榮桓, 責任忘却のための〈和解〉—《帝國の慰安》と日本の責任. 横浜: 世織書房. 2016)
- 장앤(庄严)(2015). 불멸의 증거: 지린성에서 새로 발굴한 일본의 침략서류연구. 이범수(역). 서울: 學古房.
- 차경애(2009). “1900년 전후 동북아 3대 전쟁과 군위안소”. 중국근현대사연구.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제44집. 1-24.
- 최덕수·변은진·안자코 유카(2002a). ‘위안부’관련 이해를 위한 기초입문. 서울: 여성부.
- \_\_\_\_\_ (2002b). ‘위안부’관련 문헌자료집 I. 서울: 여성부.
- \_\_\_\_\_ (2002c). ‘위안부’관련 문헌자료집 II. 서울: 여성부.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2009a).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1. 친일인명사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_\_\_\_\_ (2009b).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2. 친일인명사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_\_\_\_\_ (2009c).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3. 친일인명사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하종문(2009). “일본군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김부자·조시현·하종문 공저.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21-15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1. 서울: 한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 증언집 2. 서울 : 한울.

\_\_\_\_\_ (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 증언집 3. 서울 : 한울.

후지나가 다케시(2006).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 박환우(역). 해방전

후사의 재인식 1. 서울 : 책세상. 295-386.

堀口正夫(1987). アジアの烽火 第1部. 東京 : 丸善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吉見義明(1992). 従軍慰安婦資料集. 東京 : 大月書店.

藤永壯(1995). 上海の日本軍慰安所と朝鮮人. 桂川光正ほか. 国際都市上海. 大阪 : 大阪産業大学産業研究所.

榊山潤(1963). ビルマ日記. 東京 : 南北社.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1997a). ‘従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第1券. 東京 : 龍溪書舎.

\_\_\_\_\_ (1997b). ‘従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第2券. 東京 : 龍溪書舎.

\_\_\_\_\_ (1997c). ‘従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第3券. 東京 : 龍溪書舎.

\_\_\_\_\_ (1998). ‘従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第5券. 東京 : 龍溪書舎.

木卓四郎(1984). 憲兵余録. 東京 : 図書出版社.

永井和(2000). “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 京都 : 二十世紀研究編集委員会編.

永井和(2012). “日本軍の慰安所政策について”. <http://nagaikazu.la.coocan.jp/works/guniansyo.html>에서 2017.09.10. 인출.

長澤健一(1983). 漢口慰安所. 東京 : 圖書出版社.

知久正三郎・沼田誠司(1983). 鉄龍の軌跡. 東京 : ソコレの記録刊行委員会.

秦郁彦(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東京 : 新潮社.

\_\_\_\_\_ (2012). “スマランの慰安’たち~「青壮日記」は語る-昭和史奇談”. 文蔵. 東京 : PHP・研究所

坂邦康(1968). 蘭印法廷. 東京 : 東潮社

香川県ビルマ会(1990). ビルマの映え. 丸亀 : 香川県ビルマ会

戸井昌造(1986). 戦争案内-ぼくは20歳だった. 東京 : 昌文社

姜貞淑(2015). “从日军‘慰安妇’制性奴隶制) 看相关用语中的战争与性”. 中日韓三國婦女史學術研討會-性別與戰爭. 上海 : 復旦大學歷史系

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野戦酒保規程改正に関する件”. [https://www.jacar.archives.go.jp/aj/meta/image\\_C01001469500?IS\\_KIND=detail&IS\\_STYLE=default&IS\\_TAG\\_S1=InD&IS\\_KEY\\_S1=%E9%87%8E%E6%88%A6%E9%85%92%E4%BF%9D%E8%A6%8F%E7%A8%8B%E6%94%B9%E6%AD%A3%E3%81%AB%E9%96%A2%E3%81%99%E3%82%8B%E4%BB%B6&](https://www.jacar.archives.go.jp/aj/meta/image_C01001469500?IS_KIND=detail&IS_STYLE=default&IS_TAG_S1=InD&IS_KEY_S1=%E9%87%8E%E6%88%A6%E9%85%92%E4%BF%9D%E8%A6%8F%E7%A8%8B%E6%94%B9%E6%AD%A3%E3%81%AB%E9%96%A2%E3%81%99%E3%82%8B%E4%BB%B6&)에서 2017.9.10 인출.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司令部”. <https://kotobank.jp/word/%E5%8F%B8%E4%BB%A4%E9%83%A8-536080>에서 2016.8.19. 인출.

知久正三郎・沼田誠司(1983). 鉄龍の軌跡. 東京: ソコの記録刊行委員会. 144-145.

鈴木卓四郎(1984). 憲兵余録. 東京: 図書出版社. 78.

Abstract

## A Study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Managers of Japanese Comfort Stations

Jeongsook Kang\*

The contractors involved in mobilizing military ‘comfort woman’ and the managers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under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system. They were actually involved in the mobilizing of the ‘comfort woman’ and managing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Continuously, the managers were blamed for the problems occurred in the system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because of the ones trying to reduce or evade their responsibility to the manag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managers who worked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system. Data from the Japanese military’s official documents and oral documents of the related people to the military ‘comfort woman’ were used to clarify this.

This article analyzed 1) th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terms used to call the managers, 2) the perspective of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and military ‘comfort woman’ towards the manager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the Japanese military saw military comfort stations as the affiliated facilities of the Japanese military as it is regulated in the field canteen regulations. Also, the managers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were organized with not just mere civilians but also civilian military workers and even soldiers, which means the managers had to meet the demands of the Japanese military.

**Keywords :** military comfort station, contractors, managers, custodians, Japanese “comfort women”,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army facilities, the field bulletins regulations

---

\* Researcher,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